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답변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 활 섭 의원

- ☑️ 신탄진 역세권 및 시장 활성화 방안
- ☑️ 주민을 위한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공사
- ☑️ 2만호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방안

시정질문과답변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송 활 섭 의 원

◎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미래를 여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애쓰시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적을 가진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여전히 도시 균형발전의 그늘진 곳에 가려져 있는 대덕구 신탄진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과 외곽도로 건설 지연 문제를 짚어보고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안정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탄진지역의 역세권 및 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신탄진 5일장 날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노점상들을 피해 수레를 끌고 폐지를 수집하던 시민이 화물차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3일과 8일 신탄진시장 주변에 서는 5일장은 재래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시장의 정취나 후한 인심 등을 기대하는 시민의 바람과는 달리 최근 5일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5일장이 열리면 노점상들의 도로 점거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불편을 불러오는 무질서의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 5일장으로 생겨나는 수익은 지역

에 환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외부유출 규모는 장날 하루에만 2억 정도라고 합니다.

신탄진역의 서편에 위치한 시장은 장날이 아닌 날은 낙후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을씨년스럽기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같은 대덕구 내의 점포 규모가 더 적은 다른 시장과 비교해도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신탄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탄진 역세권 일대를 언제까지 이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연계한 북부권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첫 단추는 시장 재정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은 그 규모가 작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 주변에 위치한 노후 상가건물들의 부지를 확보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록 시장 활성화의 책무가 자치구에 있다 하더라도 대덕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규모의 필요한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의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하는 사업은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대전시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시장 재정비를 이룬 광주광역시의 송정역시장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송정역시장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손을 맞잡고 재래시장을 재정비한 성공적인 사례로, 덕분에 송정역시장은 단순한 시설 현대화를 넘어서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살려내 방문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졌지만 그 바탕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모델로 삼아 대전시가 선제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새롭게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향후 충청권 광역교통망 사업을 통해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할 신탄진지역에 특색있고 활기찬 관광형 시장이 자리잡는다면 북부권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 시 전체의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확신하는데 이장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탄진역 동편과 서편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동편과 서편을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육교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이동 동선과 많이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노후되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탄진역사에서 바로 서편으로 건널 수 있는 보행육교 신설이 절실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2년 전부터 두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장우 시장께서는 제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실무자들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낮아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보고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추진시기입니다.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바로 지금이 이 사업을 추진할 적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보행육교 설치는 다시 장기과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결육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해줄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현도교와 신구교 간 도로개설공사 관련입니다.

대덕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지도 32호선은 하루 평균 4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대전의 핵심 물류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역 상공인들 역시 물류이동의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런 문제를 위해 2018년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 현도교와 신구교를 잇는 도로건설사업을 건의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중지되었고 사업은 1년 이상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지연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물론 출퇴근 시민들의 고충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용역 중단 사유를 조사해보니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구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사전협의를 잘 이루어졌어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는 행정의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장우 시장님, 협의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한 의견은 무엇이고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수행할 경우 사업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한 지역의 도로개설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행정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대전시 미래성장동력과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북부권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소와 대전시 확장을 위한 광역교통망 연결을 위하여 도로개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만 호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방안 관련입니다.

최근 이장우 시장님은 지역 청년들이 정착하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대전을 꼭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는 1인가구 비율이 36.3%로 1인가구 중 절반이 청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 청년인구 순유입이 증가하여 대전의 청년인구 비율이 27.7%로 서울을 제외하고 특·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혼인건수도 4,347건으로 전년보다 급증하여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청년월세 지원과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등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정책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청년일자리는 물론 교육, 복지, 주거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올해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체감도와 실효성이 높은 사업들이 눈길을 끄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 주거 안정을 위한 대전형 청년주택은 민선 8기 내에 1만 호를 공급하고 이후 2030년까지 추가로 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되는 청년주택은 교통요충지에 고품질의 수요자 맞춤형 특화설계가 반영된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2만 호 공급계획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건설 임대 청년주택 5,010호, 공공매입 임대 청년주택 1,400호, 민간주택사업 기부채납 방식 456호, 청년과 신혼부부 우선분양 2,400호, 민간분양 주택사업 4,000호, 민간건설 임대 3,940호, 재개발 정비사업 청년주택 1,56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입주한 청년주택은 구암 다가온 425호와 공공매입 임대주택 505호, 그리고 신탄진과 낭월 다가온주택 662호를 포함해 총 1,592호입니다.

이는 임기 내 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2,975호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고 1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약 7,000호를 LH나 민간주택 사업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시장님, 현재까지 확보된 LH나 민간주택 사업지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대전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형 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으로 매입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매입 가능한 적절한 주택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 건설 예정인 청년주택의 경우 부지 매입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고 갑천과 패션월드 부지에 들어설 물량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는 청년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3%로 설정했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이 규정을 부담으로 느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산 문제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매년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 예산, 국비, 도시공사 기금 등을 활용하여 총 4,8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 확보와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지원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게 될 경우 주거만족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청년 주거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적인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선호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여 매입 가능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철저한 분석은 물론 주택의 품질과 입지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선호하는 평형, 입지, 가격 등을 디자인에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습니까?

민선 8기가 출범하여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임기 내 목표한 1만 호 청년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청년들이 보금자리로 인해 경제활동에 부담되지 않도록 정책의 최우선으로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탄진시장 및 역세권 활성화 방안과 현도교~신구교 간 도로 개설 그리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역경제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송활섭 의원님께서서는 신탄진 역세권 내 시장 활성화방안과 현도교~신구교 도로 개설공사, 2만 호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시장 재정비사업에 대전시가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12월 신탄진역 일원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325억 원을 투입해서 공원, 도로 등 6개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용역비를 지원했고 입안권자인 대덕구청장이 기반시설 추가확충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탄진역 일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공설시장과 동광장, 서광장을 연결하는 보행도로 설치, 주차장 조성 등을 반영하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대덕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탄진시장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민간참여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시기상조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변경계획이 수립되면 타 시·도 관광형 시장의 활성화 사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탄진역 동·서광장 간 보행육교 설치사업을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조속히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신탄진역의 경우 동쪽 신탄진동 방면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서쪽은 출입구가 없어 주민불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8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서측 출입구 설치를 검토하였습시다만 철도 운행상 문제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주도사업이자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에 신탄진역 서측 출입구 설치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였습시다만 기획재정부 협의조정사항에서 저희가 2022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시다만 B/C가 0.34로 나와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습시다.

총사업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선 충청권 광역철도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신탄진역 이용인구 증가 등 역세권 개발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측 출입구 신설을 다시 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는 등에 따라서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가 정상화되고 나면 주민 불편사항과 경제성, 또 나아가서 신탄진역 활성화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도교~신구교 도로 개설공사사업 지연사유,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본 사업은 금강변을 따라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국도 17호선을 연결하는 국지도 32호선 개설사업입니다.

2021년도 9월에 제5차 국토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문평~신탄진 도로 개설사업명으로 예타가 통과되어 2022년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대로 기본설계 시 금강과 갑천의 하천구역 내 도로 설치가 불가피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방문해서 협의한 것이 다섯 차례, 공문서 협의를 세 차례, 유선 및 전화·우편 등의 다양한 지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하천구역 내 도로 설치 시 안전대책으로 경부고속도로 교량 하부 언더패스 구간에 대해 차수벽 설치, 원격수위 계측 및 자동 통행차단 등을 충분히 제시했습니다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 입장입니다, 미호강 범람사고 등 우려, 하천구역 밖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회신이 돼서 사실상 현재 우리가 했던 하천구역 내 도로 설치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제시의견에 대해 저희도 검토해서, 한국타이어와 엑슬루타워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길이 1.7km의 지하차도 건설이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대안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략 총사업비가 849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최종협의를 만약 잘 안 될 경우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될 때 타당성을 재조사할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덕IC나 부강역~북대전IC 사례처럼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LH나 민간주택 사업지 물량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임기 내 청년주택 1만 호 공급목표는 민간 및 LH 부문에서 8,425호, 시에서 직접 추진한 공공부문에 1,628호입니다.

민간 및 LH 부문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4,072호 공급하여 2024년도 목표인 3,392호를 초과달성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공공부문 청년주택은 2024년도까지 구암, 신탄진 2개소 662호와 매입 임대주택 505호를 포함해 총 1,167호가 공급됩니다.

낭월 청년주택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내년 5월 준공되면 계획 대비 정상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 미확정된 청년주택사업인 구 패션월드 부지는 2025년 1월부터 기본구상하고 갑천은 2025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원도심은 2025년 타당성 조사 및 부지

아직 미확정된 청년주택사업인 구 패션월드 부지는 2025년 1월부터 기본구상하고 갑천은 2025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원도심은 2025년 타당성 조사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기 내 1만 호 공급, 2030년까지 2만 호 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추가비용 발생 시에 재정 지원방안 및 청년 선호입지 최우선 고려한 진행상황도 물으셨습니다.

청년주택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건립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비, 평형 확대, 주민공유 시설 건립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토지비는 공공기업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절감하고 국비는 추가확보 및 기타 재정 지원을 적극 모색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주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2022년 청년주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주택의 고급화나 평면의 다양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이나 도심중심 지역으로 저희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디자인도 기존 청년주택이 디자인 면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기획디자인을 통한 청년주택의 고급화, 그리고 역세권 중심으로의 진입 등을 통해서 진짜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공급을 제대로 해서 청년들이 출퇴근하고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쾌적한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의 정주환경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